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66
----------	------

발의연월일 : 2021. 3. 9.

발 의 자 : 이주환 · 한무경 · 金炳旭  
윤창현 · 김예지 · 김용환  
배준영 · 지성호 · 김기현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을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lt;단서 신설&gt;</u></p> <p>② (생략)</p>	<p>제57조(벌칙) ① -----          ----- <u>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u>          -----<u>. 다만,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